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밝혀진 진실과 역사 앞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어제(2022.08.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공식적으로 국가폭력 사건임을 밝혔다. 1960년 형제육아원에서부터 2017년 잔여재산 청산이 완료되어 세상에서 사라지기까지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부산에 있었다. 그 길었던 시간만큼 은폐되었던 진실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진상규명 운동 10년 만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낼 피해자들의 삶을 위해 깊은 위로와 환영의 인사를 우선 보낸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동의 시간 속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폭력 사건이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일은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슬픈 일이다. 여전히 형제복지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간 경찰의 사과가 없으며, 이어지는 2차 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기대 섞인 우려는 남아있다. 한정된 활동 기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일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외면해온 현실에 있다.

과거 부산시장의 사과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던 부산시이지만 박형준 시장 부임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 내에 있을지 모를 과거 문건과 자료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또한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와 요구로 이어졌을 뿐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사를 밝히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인권 정책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화위의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2021년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앞서 있었으며, 의료지원사업의 필요성도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조례가 개정되기도 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제시한 정책을 부산시장만 모르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부산시는 다해야 한다. 시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이른바 의료버스 사업을 통해 방문 건강검진을

제공하겠다는 수준으로 정책을 끼워팔기 해서도 안된다. 영양섭취를 위한 구강 건강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호주로 넘어간 형제복지원의 재산을 환수하거나 잔여재산 청산과정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는 등의 노력을 멈추어서도 안된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뚜벅뚜벅’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피해자들의 노력과 그 결실에 다시 한번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부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의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인권정책포럼(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옹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지역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 이주와인권연구소,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부산참여연대,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 장애인자립생활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